

단속 비웃듯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 증가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근절하자

<上> 끊이지 않는 범죄

광주시 북구 양산동 우체국에서 해오름 한방 병원 방면으로 가는 4차로 도로는 1차로만 좌회전 가능하다.

하지만 출·퇴근길 수월하게 혼잡 구간을 벗어나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당 차로를 이용하는 '암체' 운전자들을 노린 보험사기단 36명이 지난해 9월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량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차선을 이용한 차량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는 점을 노려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과 치료합의금 등을 받아채웠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와 영광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10~20대 29명은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돌한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11명은 미성년자였다.

광주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 인원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광주에서 보험사기로 검거된 건수는 90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227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도 29억원에 이른다.

수치로만 보면 올해 보험사기 한 건당 2명 이상이 가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건당 32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채웠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는 1년 동안 111건에 611명이 검거됐고, 74.5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보험사기 금액이 지난해

고의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겨 광주 올해 90건 227명 검거 교통·보험사기 등 1위 불명예 생계형서 조직·전문화 추세

8986억원으로 전년(8,801억원)에 견줘 2.0% (116억원) 증가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생계형에서 경기침체, 구직난 등이 심화되면서 조직·전문화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성년자들이 10대도 보험사기에 나서는가 하면, 범행 종류도

상해·질병 보험 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에서 자동차 사고와 관계없는 수리, 과장정구, 통증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등 전문 인력까지 범행에 가세할 경우엔 적발이 쉽지 않아 애먼 보험금 누수로 이어진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액을 연간 6조원, 공영보험(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재정에도 피해를 입힌다.

광주시 경우 교통사고·보험사기 1위 외에 자동차

사고 입원 전국 1위, 자동차사고율 전국 1위, 인 구대비 보험설계사 수 전국 1위 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광주·전남지역에 보험사기가 많은 이유를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 비상식적으로 많은 한방·요양병원, 낮은 시민의식, 보험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헤이 등을 꼽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김성훈 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행위를 명심해야 한다"며 "광주가 민주 인권의 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런 불명예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습지 탐방 1일 오전 광주전남녹색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이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에서 '광주습지 시민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6월 광주법원으로 쏠리는 눈

전두환 2·14일 민·형사 재판...금타·변호사·정치인 재판 등 줄줄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시작=재계의 이목이 쏠리고있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

노조원이 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막대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사측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문제로 판단, 사활을 걸고 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이정환)는 오는 23일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의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깜깜이 재판, 결과에 관심=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때부터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해왔고 두 차례의 선고 일정까지 바꿨다. 하지만 변경 사유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깜깜이로 진행되는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인 재판도 줄줄이=임용수 전남도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오는 24일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또 오는 10일 이석형 전 합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선원 살린 스티로폼

40분 부여잡고 표류하다 구조

어선에서 바다로 떨어진 60대 선원이 스티로폼을 부여잡고 40분 가량 표류하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1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여수시 돌산읍 계동항 동쪽 약 180m 해상에 있던 3t급 어선 A호(연안통발)에서 긴급 조난신호가 해경 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어수해경은 신고를 받고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 어선 내 승선원이 없고 엔진 시동만 켜져 있는 상태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선원이 해상에 실족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수항공대 항공기와 유관기관,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추적에 나선 결과, A호로부터 약 740m 떨어진 해상에 부유물인 스티로폼을 잡고 있는 B(69)씨를 발견했다.

B씨는 약간의 저체온증만 호소할 뿐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B씨는 이날 오전 여수시 돌산읍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통발 어획물 포획 중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로 배가 기울어지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배가 기울어지면서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에서 자동으로 긴급 조난신호가 발신돼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터널 안 교각 충돌 운전자 숨져

50대 운전자 운전 중 터널 안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숨졌다.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각동동 제2순환도로에서 A(58)씨가 몰던 승용차가 각화터널 내 기둥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뒤 병원에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에서 장거리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42년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도 4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씨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